

노사관계 동향

노사분규 동향

- ◆ 분규참가자수 및 근로손실일수 감소
- 2005년 3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보다 다소 감소함(표 1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7건으로 전년동기 17건과 같았지만 분규참가자수는 5,548명으로 전년동기의 21,057명에 비해 크게 줄었고, 근로손실일수도 46,428일로 전년동기 62,320일에 비해 감소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개소, 명, 천일)

	2003. 3. 20	2004. 3. 20	2005. 3. 20
노사분규발생건수(개소)	23	17	17
분 규 참 가 자 수(명)	4,435	21,057	5,548
근 로 손 실 일 수(천일)	43,145	62,320	46,428

주: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
자료: 노동부.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 2005년도 노동부 입법계획 발표
- 2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노동부는 총 13개의 법률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하였으며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음.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기틀 마련
 - 전임자 급여, 교섭창구 단일화, 직권중재, 대체근로 등 쟁점을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기능 강화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과 인프라 확충(노동위원회법)
 - 근로자대표기구로서의 노사협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실효성 강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해고, 임금 등 근로기준제도의 실효성 제고(근로기준법)
-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고용평등계획 수립·시행(남녀고용평등법)
 -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사업 및 인프라 확충(고령자고용촉진법)
-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지역고용촉진 지원 등 고용안정사업 확대, 고령자 고용연장지원을 위한 임금조정 지원제 도입(고용보험법)

〈2005년도 노동부 입법계획(13건)〉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업종별 현안 논의를 위한 업종별 협의회 설치 - 지역 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국회 제출 : 5월 ○시행 : 공포후 3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부)	-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개선 등 -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관련 규제완화 등	○법제처 제출 : 9월 ○국회 제출 : 10월 ○시행 : 2007년 1월
노동위원회법 (일부)	- 노동위원회의 분쟁예방 및 조정기능 강화 - 단독심판제, 주심위원제 도입 등	○법제처 제출 : 9월 ○국회 제출 : 10월 ○시행 : 2007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9월 ○국회 제출 : 10월 ○시행 : 2007년 1월
근로기준법 (일부)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 부당해고 구제방식과 내용 다양화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지기간 단축	○법제처 제출 : 9월 ○국회 제출 : 10월 ○시행 : 2007년 1월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대상 확대 (1,000인 이상 → 100인 이상) ※ 현행 1,000인 이하 노사협의회로 같음 -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업무정지에 같은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 ○국회 제출 : 8월 ○시행 : 2006년 1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 지자체·대학·노사단체 등이 제안한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 중앙고용정보원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독립시켜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에 대한 조사·연구, 인력수급동향 조사 등을 체계화·전문화	○법제처 제출 : 4월 ○국회 제출 : 5월 ○시행 : 공포일
직업안정법 (일부)	- 18세 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규정 중 관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는 19세 미만자 고용금지) 정비	○법제처 제출 : 6월 ○국회 제출 : 8월 ○시행 : 2006년 1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근거 신설 - 고령자고용촉진 관련사업 및 인프라 확충 근거 신설	○법제처 제출 : 5월 ○국회 제출 : 6월 ○시행 : 공포후 6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일부)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청구하지 않은 타 보험급여(휴업급여 등) 청구권 보호 -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국회 제출 : 8월 ○시행 : 공포일
고용보험법 (일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 운영, 지역고용촉진 지원 등 고용안정사업 확대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을 위한 임금조정지원제 도입 - 수급자격 인정기준 예외 인정,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	○법제처 제출 : 3월 ○국회 제출 : 4월 ○시행 : 2006년 1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취소 근거 규정 - 일정규모 이상 기업 등 고용평등계획 수립·시행 -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법제처 제출 : 3월 ○국회 제출 : 4월 ○시행 : 2006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상한연령 연장) -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제처 제출 : 4월 ○국회 제출 : 6월 ○시행 : 2006년 1월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거둬 유회, 위원장 책임하에 사회적 교섭 추진

- 사회적 교섭 참여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거둬 유회됨.
 - 3월 15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 참여를 반대하는 대의원 및 참관인의 대회장소 점거로 인해 무산됨.
 - 지난 2월 1일에도 같은 이유로 대의원대회가 유회된 바 있음.
- 대의원대회 유회 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투쟁계획과 함께 노사정 교섭들의 추진계획을 발표
 - 4월 총파업 방침과 관련하여 4월 1일, 4시간 경고파업,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시 다음날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등 투쟁계획 발표
 - 사회적 교섭방침과 관련하여 위원장 책임하에 노사정을 포함한 정당 등과 대표자 회의를 시작하고 회의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다룰 것을 제안

할 것임을 밝힘.

-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교섭참여를 적극 환영하며 교섭틀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이내에 노사정과 여야 정치권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안함.
- 한편 경총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번 결정이 비정규직 관련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총력투쟁 전개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 경총 올해 임금인상률 결정

- 한국경총은 3월 14일 ‘2005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확정하여 회원사에게 권고함.
 - 경총은 내수침체와 투자부진, 고령화의 진전, 제조업 공동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인상률을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작년 수준에서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할 것을 제시함.
 - 경총은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정기승급제도의 점진적 폐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산하 회원사에 권고함.
- 경총발표에 대해 양대노총은 비판 성명 발표
 - 한국노총은 경총의 주장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임금 삭감을 의미하며 근로자 임금동결은 부익부 빈익빈의 악속환을 낳는다고 주장
 - 한국노총은 정규직의 경우, 월고정임금 총액(월정액급여+상여금월할액) 기준 9.4% 인상을 요구하고 비정규직은 19.9% 인상을 제시한 바 있음.
 - 민주노총은 경총의 임금조정안은 근로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임금억제 논리에 불과하며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쟁취 등을 위해 상반기 임단투 시기에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힘.
 - 민주노총은 정규직 9.3±2%, 비정규직 15.6%의 요구율을 제시한 바 있음.

◆ 비정규직 입법 관련 노사간 공방

- 경총, 상공회의소,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관련 5단체는 비정규직 법안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힘.
 - 우선 파견업종에 있어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 포기 등 기존 법안에서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됨을 주장
 - 둘째로 노동계의 비정규직 법안 반대 총파업의 철회를 주장
 - 셋째로 경제계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인력활용에 대한 합리성을 높여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임을 밝힘.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성명 등을 통해 현행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힘.
 - 한국노총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노사정 당사자가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들 속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며, 만약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총력투쟁과 함께 중앙단위 모든 노사정 대화기구에 불참할 것임을 천명함.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우선 4월 1일, 오후 4시간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강행처리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
 - 양대노총 위원장은 3월 21일 회동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여기서 비정규직 법안 교섭절차를 논의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함.

주요노동일지

(2005. 2. 21~3. 20)

년·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5. 2. 21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사무관 리직 지회: 노조결성 신고
2. 22		· 민주노총: 최저임금 50% 보장 법 개정 쟁취결의대회 개최	
2. 24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포럼,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 개최	·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관련 결의대회 개최	· 금속노조 대성애피씨지회: 임단협 관련 전면파업 계속 (2004. 7. 20~)
2. 25	·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개소식 및 토론회 개최		
2. 28		· 민주노총: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탄압분쇄 결의대회 개최 · 언론노련·언론노조: 대의원대회 개최, 위원장 선출	· 현대자동차노조: 불법파견투쟁 전조합원 보고대회 개최
3. 3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4월 1일 4시간 시한부 경고 파업 결의 · 서울지역 노사정: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결의문 채택	· (주)코오롱 구미공장노조: 정리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3. 7		· 한국노총: 열린우리당 의장단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쟁방침 관련 기자회견 개최	·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부분파업 계속(2004. 12. 23~)
3. 8		· 민주노총 금속연맹: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문제 관련 결의대회 개최	· 대우중합기계노조: 매각협상 관련 시한부 부분파업 계속 (3. 7~)
3. 10		· 한국노총: 창립 59주년 기념행사 및 위원장 취임식 개최	
3. 11	·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3. 14		· 한국경총: 2005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 발표	· 현대차 비정규노조: 정규직화 등 요구 농성 계속(1. 18~)
3. 15		·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등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무산	· (주)코오롱 구미공장노조: 정리해고 관련 본사 앞 집회 등 반발 계속
3. 16			·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관련 위원장 사퇴
3. 18		· 민주노총: 4월 총력투쟁과 사회적 교섭방침 관련 입장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임단협 관련 파업돌입